

建國以後의 火災鎮壓技法의 變遷에 關한 考察

朴 泰 攸*



編輯者註：本稿는 1987年度 韓國火災學會學術講演會(1987. 11. 28. 大韓建設協會會館) 에서의 講演內容이다.

1. 서 론

근세 우리나라의 화재 실태를 보면 역사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인 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일제 36년의 암흑시대와 해방, 미군정 및 정부 수립의 혼란기, 6. 25동란 자유당 시대에서부터 5.16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경제적 사회적인 면에서 획기적인 변모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 일제 시대부터 1950년

대까지는 농업 등 일차산업 위주에서 60년대 이후 수차례의 성공적인 경제발전에 힘입어 경공업에서 중화학 공업으로까지 매우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다.

이러한 급속도의 경제성장으로 국민의 생활 수준 역시 향상되어 주연료의 경우 1950년대까지는 고체연료에서 석유, 가스, 전기의 시대로 발전하여 왔고, 조명도 등잔, 양초, 석유 등에서 전등으로 바뀌었으며, 난방기구 역시 화덕, 난로, 유류버너, 가스렌지, 전기히타 등으로 변모하면서 시대의 변천과 함께 우리의 생활도 편리해져 왔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사회는 급격한 공업화와 산업화의 영향으로 인구의 도시 집중화 현상을 초래하여 건물의 고층화 및 산업시설의 대형화로 사회구조가 점차 복잡, 다양화 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이렇게 발달해 온 사회의 이면에서는 화재 등 각종 재해가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우리 경제성장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은 세계 무역량의 1.67%를 점하고 있으며, 86년도에는 사상 최초로 연간 70억불 상당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해냄으로써 도시와 지방의 구분없이 대형 고층 건물과 대소 규모의 산업시설이 전국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화재예방과 진압에 관한 연구는 모든 산업시설과 국민생활보호를 위하여 깊이 있고 전문적인 대응책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다.

*理事, 內務部 消防局 企劃擔當官

2. 화재발생의 실태

가. 화재발생추세

(1) 화재발생

화재통계에 의하면 1945년부터 1950년까지의 년평균 화재 발생 건수는 1,651건 이었으며, 1951년부터 1960년까지는 2,878건, 1961년부터 1970년까지는 4,688건이었고, 1971년부터 1980년까지는 7,284건, 1981년부터 1986년까지 6개년 간의 년평균 화재발생건수는 7,939건으로 1950년대에 비하여 480%가 증가되었다.

○년대별 화재발생 증가율

연 대 별	45-50	51-60	61-70	71-80	81-86
년평균발생건수	1,651	2,878	4,688	7,284	7,939
전년대비증가율	100 %	174 %	162 %	155 %	109 %

(2) 화재피해

○재산피해

화재로 인한 재산의 피해는 해방이후 1950년대에서는 현행화폐 단위로 환산하여 년평균 3억 원 정도에서 1960년에는 7억 2천만원으로 2.4배가 증가하였으며, 1970년대에는 60억 4천만원, 1980년대에는 125억 9천만원으로 1950년대에 비하여 무려 41.9배 이상으로 급속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간의 물가 상승율을 고려하여 1975년 기준 불변가격으로 비교하였을때 1960년대는 년평균 28억원이었으며, 1980년대에는 4.4배인 125억원으로 급속히 증가되고 있다.

또한 G.N.P에 대한 화재 피해율을 비교하면 1960년대에는 년평균 0.09%에서 1970년대에는 0.06%, 1980년대에는 0.02%로 낮아지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G.N.P 증가율 및 피해증가율을 보면 먼저 경상가격으로 G.N.P 증가율은 1960년대에는 년평균 27.5%이고 1970년대에는 30%인데 반해 화재피해 증가율은 1960년대의 년평균 72%에서 1970년대에는 101%로 증가율이 점차 크게 나타내고 있다.

(3) 발생원인

년대별로 화재 발생 원인을 요약해 보면 1945

년부터 1960년대까지는 온돌, 아궁이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나, 1970년대 이후에는 전기, 유류의 순으로 바뀌어졌고, 1980년대에 와서는 전기화재가 30%에 육박하였으며, 유류화재는 70년대의 18.6%에서 11.4%로 현저하게 감소되었으나 방화사건이 5%로 증가하였고, 가스, 화공약품, 기계마찰, 작업장 화기 등 에너지사용의 다양화로 화재발생 원인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년대별 원인별 화재발생율

원인별 년대별 발생율 (%)	총발생 건 수	온 돌 아궁이	쓰레 기장	담배 담배	전기 전기	유 류	난 방 기 구	방화
40년대	1,651	46.7	10.4	8.2				3
50년대	2,878	20.3		10.9				3
60년대	4,688	16.4		10	10	10	13	3
70년대	7,284	8.5		10.4		19.72	10.62	3
80년대	7,939			10.4		29.7	11.4	5

건국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담배에 의한 화재는 높은 발생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기와 방화에 의한 화재사고는 계속해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4) 화재발생대상

시대의 변화에 따라 화재발생대상도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1950년대 이전에는 주택화재가 60%까지 달하였으나, 80년대에 이르러서는 28.6%로 크게 감소한 반면 공장화재는 50년대에 8%이던 것이 80년대에는 18%로 크게 증가하였고, 점포, 음식점, 차량 등의 화재가 급속한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다.

70년대 이후에는 호텔, 시장, 고층건물, 대형 산업시설에서 대형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나, 대부분의 대형화재는 발생초기 진화작업에 손쓸틈도 없이 급격하게 연소 확대되었다.

특히 호텔화재는 다수의 인명피해를 발생케 하였으며, 공장과 시장화재는 많은 재산피해를 방불케 하였다.

- * 3건의 호텔(대연각, 대왕코너, 대아호텔) 화재로 사망 270명, 부상 142명이 발생하였고,
- * 대형재산피해는 윤성방적 화재에서 150억원,

서문시장 화재로 46억원, 세대제지 화재로 34억원, 태광산업 화재로 30억원, 금성사 창원 공장 화재로 29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나. 년대별 화재사고의 특징

(1) 1950년대

1950년대의 화재사고는 온돌, 아궁이에 의한 주택화재가 많았으며, 규모면에서는 군사시설인 송유관화재, 역구내의 열차화재, 목조학교 건물화재를 들 수 있으며, 50년대의 대형화재로는 1953년 11월 27일에 부산역 구내에서 발생하였던 화재로 50명의 사상자와 176억원의 재산피해를 발생한 화재사건을 들 수 있다.

(2) 1960년대

5.16혁명 이후 경제개발에 의하여 일차산업에서 경공업, 중화학공업에 이르기까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이와 같은 급격한 산업화 현상은 농촌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무허가 판자 밀집지역을 양산하였으며, 시장경제가 급속히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산업시설과 더불어 주택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대단위 공동주택의 건설이 시작되었고, 공장, 시장, 백화점, 업무용빌딩, 여관, 호텔 등 크고 작은 건물들이 전국 각지에서 매년 늘어나는 시기였다.

행정적인 제약을 완화하기 위하여 민원 간소화 시책으로 1963년도에 소방법 제9조에 의한 건축 등의 조항 삭제와 동법 제29조에 의한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사항을 확인 점검하는 소방검사 등 화재예방 활동을 제한하였던 점은 소방사상 특기할만한 일로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1963년도에 시행한 제도 변경의 결과는 1960년대 후반부터 연속적인 대형화재가 발생되어 시장화재 20건, 공장화재 20건, 판자밀집지역 화재 7건 등, 사회 이목을 집중 시킬만한 초대형 화재 사건만도 47건이 발생하였으며, 전체적인 화재발생 건수도 178%로 증가하게 되었던 것이다.

(3) 1970년대

1970년대는 높은 경제성장으로 국민생활의 향상과 해외시장의 개발에 힘입어 산업경제건설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60년대 후반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화재사고는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켰던 대연각화재, 2차에 걸친 대왕코너화재, 뉴 남산호텔화재, 윤성방적화재, 서울시민회관 화재 등 초대형 화재가 잇달아 발생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이와 같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대형화재 사고의 문제요인을 검토하였던 바, 1963년도에 제도개선을 위하여 소방법에서 삭제하였던 건축등의 조항과 소방검사 활동의 제한 그리고 경제발전으로 고도성장이 이룩된 사회적인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는 소방력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그에 따른 대책으로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의 추진과 문제되었던 법령의 개정 및 화재예방과 진압활동상 필요한 법령을 새로이 제정하여 소방행정기관과 소방대상처의 관계자가 상호협조하여 꾸준한 노력을 기우려 왔던 결과, 1970년대 후반에 와서는 대형화재의 예방과 초기진압활동에 거시적인 효과를 거양하기 시작하였다.

(4) 1980년대

1980년대에는 부산 대아호텔화재로 38명의 사망자와 68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고, 대구 초원의집 화재로 25명의 사망자와 69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다수의 인명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화재사고와 20억원 이상의 재산을 소실시킨 군산 세대제지, 부산의 태광산업, 충남 대덕군의 충남방직, 천원군 소재 독립기념관 화재가 년례 행사처럼 발생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에 와서는 70년대 후반에 있었던 대형화재 양상과는 달리 연소 확대되는 과정에 많은 변화를 보였으며, 발생건수 면에서도 109%의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화재발생원인과 그 대상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점이 있었다.

예컨대 원인에 있어서는 엘·피 가스나, 도시가스, 전열기구, 방화, 담배불 등에 의한 화재를 들 수 있고, 대상별에 있어서는 아파트, 자동차, 여관 등의 화재가 많아지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사회적인 환경변화에서 오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된다.

3. 진압소방활동의 변천

가. 70년대 이전의 진압활동

한국 소방사의 전환점은 대연각호텔 화재사건을 기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972년 이전의 진압소방활동은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의용소방조직에 의하여 진압활동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서도 진압요원의 구성을 보면 정규 소방공무원은 40%에 불과하였으며, 그외의 구성요원으로는 임시적인 유급상비 대원이 50%였고 나머지 10%는 경찰관 신분으로 검무청 근무를 명받은 직원이었다.

이들 구성원들에 대하여 화재진압이나 예방에 관한 기초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발령과 동시에 제복을 착용시켜 근무에 당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숫적으로도 충분한 인원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현장에 출동하였을 경우 진압활동에 필요한 절대인원이 부족한 상태였으며, 소방관서의 분포도 설치 기준에 현저하게 미달되어 화재현장까지 도착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던 것이다.

당시 소방력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의 소방관서는 소방서가 49개소, (서울 4, 부산 3, 대구 2) 파출소 159개소, 소방차 1,394대, (의용소방대 보유차량 50% 정도였음)에 불과하였으며, 보유한 소방차량도 대부분이 일제때부터 사용하였던 노후된 차량이었고 그외에는 미군에서 사용하다가 폐차된 군용차량을 인수받아서 소방차로 개조하여 물 탱크와 소방펌프를 부착하여 사용하였던 관계로 화재현장 출동도중에 고장이 발생하여 도로변에 세워두기 일쑤였다.

또한 다행히 화재현장에 도착하여 진압활동에 당하였을 경우에도 펌프 고장으로 임무수행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소방용수 시설이 불비하여 차량에 적재한 물을 사용하고 나면 신속하게 보급할 수 없어서 초기진압이 가능하였던 화재가 소화용수의 공급에 원활을 기할 수가 없어서 대형화재로 연소확대시킨 사례도 있었다. 인명구조 활동에 있어서도 고가 사다리차가 없어서 고층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안타깝게도 그대로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딱한 실정이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대연각호텔 화재사고시 중국 여공사의 구조활동이였으며, 그외에도 지하실 화재시 공기호흡기가 없어서 옥내진입을 하지 못한 경우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안타까운 경우도 많았다.

나. 70년대 이후

1971년 12월 25일에 발생하였던 대연각호텔 화재사건은 한국소방사에 일대 변혁을 가져왔다. 1973년도에 소방법을 대폭 개정하여 그간 삭제되었던 건축 허가 등의 업무를 부활하고 소방검사 제도 및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관리에 관한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소방시설 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크게 강화하였다. (소방법 제 12조 및 동법 제29조, 21조, 38조, 42조, 1항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화재보험협회가 신설되어 소방검사 전문기관으로서 보험가입 대상과 일정규모 이상의 특수 대상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의무화 하여 건축물에 대한 화재 취약요인을 시정보완함으로써 대형 화재의 요인을 제도적으로 예방하는 시책을 펴나가게 되었다.

소방력 보강을 위해서는 1972년에 서울과 부산시에 소방본부를 설치하여 시장의 책임하에 자치 소방행정을 수행토록 하였으며, 1973년도에는 중앙정부에서 지방교부금을 지원하여 일본에서 최신형 고압 소방펌프차 50대, 15미터 굴절차와 32미터 고가사다리차 13대를 도입하였고 독일에서는 당시 세계에서 사다리 연장길이가 제일 높은 44미터 고가사다리차 6대를 주문 제작도입 하였으며, 배연차 4대, 화학차 6대 등 고가의 최신형 장비를 일시에 보강하게 되었고 그외의 지방도시는 연차계획에 따라 보강하였다.

장비 보강에 따라 운영요원도 증원되어 현대적인 진압 소방체계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소방관서의 증설면에서 보면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5분 이내의 현장도착이 가능하도록 소방서와 파출소를 증설하게 되었고, 관서의 증설에 따른 소요인력과 장비의 보강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소방력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소방력 보장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년대별 소방력 보장현황

구 분	소 방 서	파 출 소	소 방 관	소 방 차	소 방 용 수	소 방 학 교	비 고
1960 년말	31	52	974				
1970 년말	49	159	5,870	1,394		1	
1987. 6월말	79	296	8,957	2,241	29,224	2	항공대 1

화재진압활동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통신장비와 진압대원의 개인 장구를 들 수 있다. 1970년도 이전의 소방통신은 수동식전화와 경찰 무선에 의존하여 왔으며, 현장지휘를 위한 휴대용 무전기를 갖추지 못하여 출동차량의 통제와 현장에서의 지휘는 뛰거나 핸드마이크로 명령에 의한 구전방법에 의하였고 진압소방요원의 개인 보호용 장비는 방수복과 방수모, 고무장화가 전부였다.

이와 같이 취약한 소방통신 장비와 소방관의 보호용 개인장비도 크게 개선되어서 소방진압차량에 고정용 무전기를 장착하였고 화재현장에서 휴대용 무전기를 각자 휴대하여 무선망에 의한 현장 지휘체계를 갖추었으며, 각소방서 별로 지령실을 설치하여 지역단위로 통신교신을 가능케 함으로써 난청지역을 해소하였다.

119 화재신고 접수도 자동화 시스템을 확보하게 되었고 개인 보호용 진압장비로는 공기호흡기, 방열복, 자외선측정기, 연기농도 측정기, 가스테스타기, 고성능 조명등, 긴급피난용 로프, 간이 파파기구 등을 휴대함으로써 화재현장 활동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 그러나 화재현장에서의 진압소방관에 대한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은 언제나 상존하고 있다.

건국이후 순직한 소방관은 총 136명으로 72년 이전 순직자가 72.7%인 99명 이었으며, 부상자는 57%인 473명 이었고, 72년 이후에는 사망자 37명, 부상자 318명이었다.

진압용 개인 보호장구와 현대적인 안전장비를 갖춘 이후 소방관의 위해 요인은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진압기술훈련에 있어서도 80년 이전에는 교육적 선배치하여 현장체험에 의한 기술습득으로 경험을 통한 진압활동에 의존

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하여 도심지 근무 소방관과 외곽지 근무자간의 현장활동능력에 편차가 심하였다. 1978년 7월 27일자로 내무부의 소방학교와 1981년도에 서울시 소방교육대의 신설로 소방공무원들에 대하여 체계적인 기술훈련을 실시하게 됨으로써 소방대상처에 설치된 자체시설의 활용과 헬기, 61미터 고가사다리차 등 현대적인 소방장비를 활용하여 고층건물에서의 인명구조활동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진압소방의 제1요체라 할 수 있는 소방용수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상수도 배관 교체시와 신흥 주택지개발 지역에 대한 소화전 신설과 공동 정호의 설치 그리고 대형건물 신속시 건축주 부담으로 설치하는 상수도 직결식 소화전의 설치의무 부과등으로 설치된 소방용수 시설은 소화전 26,505개소, 저수조 1,622개소, 급수탑 1,097개소로 총 29,224개소를 확보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소화용수 시설은 서울시의 경우 설치기준의 44%에 불과하고 있어 앞으로도 소화용수의 확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할 급선무가 되고 있다.

최근 도시의 진압소방활동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자동차 문제는 소방차량의 출동에서부터 발화건물의 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화재현장에 공급하는 소화용수를 물탱크차로 보급하고 있는 한국 소방의 후진성을 탈피하고 물탱크차와 소방용수 공급으로 인한 도심지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서는 시설기준 수칙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많은 량의 시설 확보 없이는 날로 복잡해지고 있는 도시의 진압소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상과 같이 건국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진압소방활동과 변천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실로 많은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회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화재의 예방과 진압대책을 병행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신속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여 과거에 경험하였던 대형사고를 또다시 재현하지 아니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4. 진압의 소방활동과제와 해결방안

1970년대 중반까지도 우리나라의 소방장비는 미군의 잉여차와 막대한 외화를 지출하면서 수입에 의존하여 왔었다. 그러나 소방차의 국산화로 소방장비 보강에 따른 어려움은 해소되었다.

선진국으로서의 도약을 위한 경제발전과 이에 따른 다양한 산업시설의 확충, 도시구조의 변화 그리고 국민소득 증대에 따른 생활향상 등으로 사회적인 여건은 날로 변화되어가고 있으며, 그에 따라서 화재발생의 양상도 달라져 왔음은 이미 앞에서도 지적하였다.

앞으로 크게 우려되는 화재사고는 지하가, 원자력발전소, 초고층건물 대단위 석유화학공업단지, 대규모 산업시설 노후아파트, 대형복합건물 등의 화재를 들 수 있으며, 진압활동에 있어서는 앞서 지적한대로 교통체중에 의한 소방차의 출동장애와 소방용수의 부족, 그리고 특수건물의 옥내 진압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소방력의 보강과 사회적인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개선이 함께 이루어짐으로써 화재발생시에 신속한 초동조치를 취하여 대형 화재사고의 확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어떠한 경우이든간에 문제해결을 위하여는 막대한 예산이 뒤따르게 마련이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1988년부터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을 경우 소방행정은 지방자치 단체의 고유업무에 속하는 책임행정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인바, 재정적으로는 공동시설 세액을 일반행정수용비로 전용하지 말고 세금징수의 목적대로 공공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에만 전용하도록 하고 이 재원으로 부족되는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지방교부금으로 보조하여 줌으로써 전국 소방행정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약해갈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우려되는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본 학회의 회원을 위시하여 전문가들의 연구결과에 의한 제안을 행정당국에서 충분히 수렴하여 사전에 대비책을 강구해 나감으로써 한국소방발전의 보다

밝은 전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5. 결 론

우리나라의 화재발생추세를 보면 1일 평균 22-3건의 화재사고가 발생하며 2~3명의 사망자와 7~80여만원의 재산을 소실시키고 있다. 앞으로 산업경제의 발달로 국민소득이 증대되어 대망의 일인당 국민소득 5,000불 시대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대형화재의 예방과 초기진압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국민소득 5,000불 시대가 도래되었을 때에는 화재로 인한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국민의 관심이 현재보다는 더욱 커질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소방당국에서는 1990년대까지 소방용수 시설을 기준의 90%까지 보강하여 물탱크 소방차를 없애고 충분한 소방용수를 제한없이 공급하여 신속한 진압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88년도에는 소방구조대를 편성하여 화재사고 이외의 재난시에도 소방당국에서 구조업무를 담당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화시대에 대비하여 소방서 미설치 지역에 대하여는 소방관서를 신설하고 도심외곽의 신개발지역에는 소방관 파출소를 설치하여 진압소방의 사각지역을 줄여 나가고 있으나 대도시와 지방소도시를 막론하고 새로운 소재의 건축자재를 사용한 대형건물의 증가와 산업시설의 집산화 내지는 거대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깊고 넓어져 가는 지하공간의 확대, 에너지 소비량의 증가 등 화재발생 및 연소확대 위험요인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적인 환경의 변화에 대비하여 소방당국에서도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 완벽을 기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므로, 범국민적인 협조와 전문가들의 참여하에 화재의 예방과 진압소방활동의 선진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화재학회회원 여러분의 화재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와 소방행정 제도 개선을 위하여 많은 연구와 참여가 있을 때만이 소기의 목적달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되는 바이다.